

담대한 도전으로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

김덕현 연천군수

취임 1주년 교통·인구·예산 집중
1호선·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통
서울~연천 고속도로... '균형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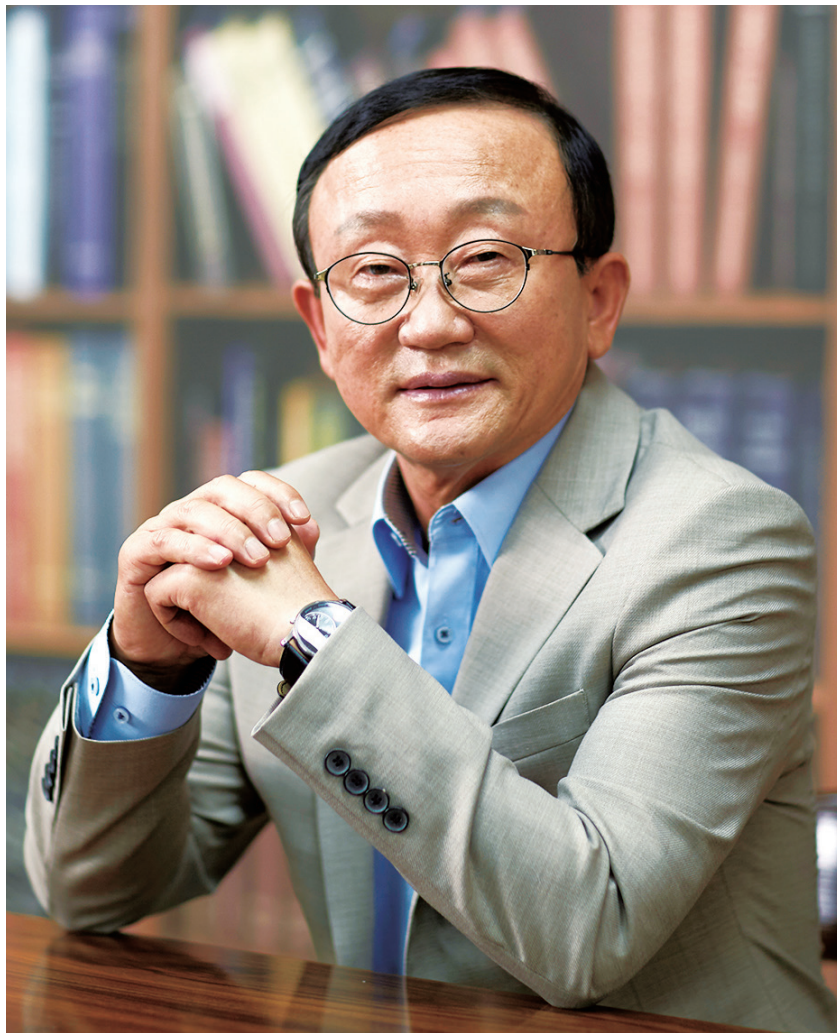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되고 1호선이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연천군을 둘러싼 교통 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울~연천 고속도로 사업이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높여겠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교류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연천 고속도로 2024년 사전조사 용역비 반영과 함께 포천~철원 고속도로 용역비 연천지선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같이 밝혔다.

"담대한 도전과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강조한 김 군수에게서 앞으로의 연천군 행정에 대해 들어본다.

—군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현장행정'을 펼쳤다. 1년간 소회는.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고 '현장행정'을 추진했다. 40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민선 8기 연천군수로 취임한 뒤 1년간 매주 지역 곳곳의 현장을 발로 뛰면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집중했다. 그 결과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개통, 전철 1호선 개통(하반기 예정), 연천군 주도로 기회발전특구 신청 기회가 마련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연천', 접경지역을 넘어 남북 평화시대, 물류 중심 경제도시 연천군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사



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최전방, 인구감소지역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해 '살기 좋은 연천'을 만들고자 한다.

—기회발전특구 기회가 생겼다. 연천군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법안 수정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가 지난달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별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당초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지자체를 비수도권으로 한정했지만, 우리 연천군과 정치권의 노력으로 수도권이던 인구감소지역이 자 접경지역인 연천군 등의 지자체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교통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렸다.

앞서 지난 2월 국회를 방문해 장제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수도권 인구감소 지자체의 현실과 특별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연천군 등을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 연천군의 이 같은 노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 지역에 연천군 등 수도권 경계지역인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되는 결실로 이어졌다. 이번 특별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견고한 프레임은 깨어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연천군의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동두천~연천 전철 1호선 시대를 맞은 연천군의 비전은.

연천군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동두천~연천 전철(1호선 연장)이 하반기 개통한다. 교통망 확충을 통해 서울 및 경기도 시·군과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원선 전철은 동두천 소요산역까지 운행하는 수도권 1호선을 연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동두천~연천 구간은 총 20.9km, 복선 전제 단선으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률이 95%를 넘어섰으며 개통을 앞두고 있다. 1호선이 개통되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져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1호선 및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개통 등 교통인프라가 대폭 확충됨에 따라 지역 경제도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수를 원하되 국도3호선 정면이 요구했다.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인 연천군의 현실을 설명하며 서울~연천 및 포천~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동두천~연천 전철 건설사업으로 운행이 중단된 경원선(연천~백마고지) 열차 운행 재개를 건의했다. 서울~연천 고속도로는 정부의 국경과제로 남북 교류 협력에 대비하고 경기북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2021~2025)'에 따라 남북5축으로 명명됐으며, 도로 길이 50.7km, 총 사업비는 2조8051억원 규모다. 남북 교류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경기북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 서울~연천 고속도로 2024년 사전조사 용역비 반영과 함께 포천~철원 고속도로 용역비 연천지선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한성대 기자

시민행복 의정 구현하는 선진의회 도약

인천시의회 개원 1주년 행사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제9대 인천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시대상상 부합하는 새로운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사벨드미안에서 허식 의장 등 40명 시의원, 이형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도성훈 시교육감, 박창규 의정회장 등 역대의 장, 의회 사무처 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시민 행복 의정 구현을 위해 그동안 펼친 의정활동 성과와 성과를 살펴보고 의회 구성원 간 격려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허식 의장은 "지난 1년간 인천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목표아래 시민 행복 의정 구현을 위해 힘써 달랐다"며 "지난 32년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기대를 잘 알고 있다. 지난 1년 새로운 의정활동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였던 만큼 앞으로 남은 3년은 더 나은 의정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상상 부합하는 새로운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이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대한민국 최고 광역의회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자리에 함께한 시의원들도 "인천시·인천시교육청과 상호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해 나가겠다"며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초심으로 돌아가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울러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의정 발전 공로자에 대한 우수의정대상 수여와 각 상임위 회기 우수의원 및 청사 방호·관리 등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품 전달도 있었다.

그동안 자치분권발전 연구회 의원과 사무처 실무위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TF를 구성하고 연구해 마련한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전달하고 인천시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답례로 해당 연구회 소속 이단비·김재동·김용희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해의 출산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대신해 이형숙 부시장과 도성훈 시교육감은 "제9대 시의회가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덕분에 인천시민 행복과 인천시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탄탄한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 750만 재외동포 모두가 행복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김철민 의원, 교부세 12억원 확보

성호공원 주차장 개선 5억
재난감시 CCTV 구축 4억원



전사고 위험이 높은 부곡동 정재 2여 린이공원 내 방치된 시설을 정비하고 기존의 경로당도 개선 해 어르신과 어린이를 아우르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철민(민주당, 안산상록을·사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김 위원장이 확보한 특별교부세 내역은 성호공원 주차장 시설개선공사 5억원 △부곡 100세 안전공원 조성 3억원 △재난상황 감시용 디지털 뉴딜형 CCTV 구축사업 4억원 등으로 안산시 지역의 공원과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성호공원 주차장(이동 620번지)은 초등학교와 주택가에 인접해 있고 인근에 체육시설이 많아 이용률이 높은 데 시설 노후화로 포장노면이 대거 파손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개선 요구가 컸다. 이번 예산 확보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곡 100세 안전공원 조성사업은 조성된지 30년이 넘어 노후화되고 안

김 위원장은 이 놀이터를 '기적의 놀이터' 형태의 주민참여형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재난상황 감시용 디지털 뉴딜형 CCTV 구축사업은 산림이 많고 산수풀을 끼고 운행 중인 도로가 많은 안산시 특성 상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원사건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지만 노후화된 시스템과 부족한 감시장비로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서 아이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이고 상록구 주민들의 일상이 안전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수 기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5억원 확보

김교홍 의원

민주당 김교홍(인천서구갑,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생활안전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25억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행정부 특별교부세는 △석남복지도시숲(1·3단계) 야간조명 설치 11억 △청라 심곡천 일대 경관녹지(청라16호) 정비 3억 △갑종공원(가좌1동)·원신근린공원(신현원정동) 등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8억 △가재울마을·신현마을·가좌3구역 등 보행로 LED 설치 3억 등 총 25억원이다.

석남복지도시숲의 경우 현재 산책로에 야간조명이 없어 주민들이 도시 숲 이용 시 야간보행이나 생활범죄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에게 밝

고 안전한 복지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자 산책로 등에 야간조명을 설치한다. 또한 경관 조형물과 포토존도 설치해 도시 이미지 제고도 가능할 전망이다.

청라 초입에 위치한 심곡천 경관녹지는 인근에 아파트 및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의 이용이 많다. 여기에 산책로에 관목을 식재하고 휴게·운동시설을 정비한다.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갑종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발판이 빠지는 등 이용 시 안전 사고가 심각하게 우려되어 펜스로 막아 이용을 금지한 상태이다. 이에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 사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자 갑종공원·원신근린공원 등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안중삼 기자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발언에 야당 '발끈'

"극우보수만의 대통령 자처"
대통령 시각에 우려 표명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을 적군과 아군으로 나눈 극우적 발언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은 28일 자유총연맹 기념식에 참석해 "왜곡된 역사 의식·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UN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연설했다.

이에 야당은 "윤 대통령은 어제로 스스로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극우 보수만의 대통령으로 남은 4년을 끌고 가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맹폭했다.

김한규·민형배·윤건영·진성준 등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1명은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하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편협한 사고 체계가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이들은 대표해 김한규·민형배·윤건영·진성준 등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소통관에서 어떤 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해도 정치권이 뒤집히고 공식적인 사과와 사퇴를 요구할 판에 현직 대통령이 어찌 이와 같은 발언을 하고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에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이라 지칭했던 그 정부에서 검찰총장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그런데(윤 대통령은) 자신이 몸 담았던 정부 노선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영주·권철승·고종환·이



김영주·권철승·고종환·이인영 의원 등이 29일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인영 등 전 장관 출신의 10명의 국회의원들도 "평화적 통일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책무 중 하나"라며 "윤 대통령은 색깔론과 이념논리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적대적 남북관계를 강화하는 일 대신 취임 선서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명서를 냈다.

이에 더해 이재광 정의당 대변인은 "정책적 방향이 다를 수 있다.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 집단을 반역분자로 몰아가는 건 차원이 다른 문

제"라며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 정치를 중세 시대 종교 전쟁마냥 해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더군다나 박인환 경찰제도개선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주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극우적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망언·방발을 일삼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이어지니 당연히 대통령 역시 극우적 인사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홍정윤 기자

공항소음 지역 주민지원시설 '무료'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분회의 통과에 총력"

배준영(국민의힘, 중구·강화·옹진군) 의원은 28일, 공항소음 대책 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 지원사업으로 설치

된 시설에 대해 20년 범위에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항공기 소음자로부터 소음부담금을 징수해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어 소음 피해 주민들은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사용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지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복수의 법안에서는 해당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두어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배 의원은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해 설치된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해 더욱 폭넓고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안중삼 기자